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속보]"투표함 반출 안돼"...잠실7동 100명 넘는 인파 몰려 대치중	사회	
2	靑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다"	정치	
3	"탱크 고객님"이라니...스벅 닉네임 악용한 조롱에 5·18단체 분노	경제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일인 3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근처에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인파가 몰렸다. 일부 시민과 선거관리인 측이 대치하는 가운데 유튜버들까지 몰려 들었다.

이날 오후 잠실7동 제2투표소 근처에는 유튜버 등 100명이 넘는 인파가 선거관리인 측과 대치 중이다. 투표소 근처에 모인 인파는 투표함이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다. 현장 사진, 영상 등에는 투표소 주변에 몰려든 인파와 주변을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다. 일부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유튜버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촬영 거치대까지 갖추고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일부는 투표소 근처에서 팔을 앞뒤로 흔들며 "부정 선거"를 연호했다. 한 시민은 투표함에 대해 "증거물"이라며 "증거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 진행 도중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잠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이후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파장이 커지자 오후 9시경 경기 과천시 선관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라며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중대한 투표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라며 "서울 선거 개표를 지금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출구조사가 보도된 뒤에 한참 동안 그 투표들이 진행된 것 자체가 투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개표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거대책 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계 없이 많은 서울 시민이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가 마감되고 봉인 절차를 거쳐 개표소로 이송됐고, 개표가 진행 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2) 기사/뉴스요약

청와대는 3일 벌어진 서울 일부 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이날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대기하거나,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비슷한 상황이 서울 동작구, 강남구 광진구 등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커지가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연석 원내대표 등은 개표 즉각 중단 및 진상조사, 서울시장 선거 재실시 등을 요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표 중단 요구를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에서 “개표 중단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관위의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현재 진행 중인 개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던 청와대는 이후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3) 기사/뉴스요약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스타벅스 매장에서 고객을 부르는 닉네임 을 악용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5·18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특정 대상을 조롱하는 단어를 영수증과 주문 닉네임에 등록해 공공연히 부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등에서 닉네임을 설정한 후 사이렌오더로 주문하면 설정한 닉네임을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탱크’나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 등을 지어서 조롱하는 행위가 이어져 논란이다.

단체는 “공동체의 상식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조롱 행위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따라하기식으로 퍼져나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스타벅스 내부에서 발생했던 마케팅 사태에 대해 회사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책임져야 할 잘못과 사회적 비판의 대가를 현장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며 “직원들이 무분별한 혐오와 조롱에 또다시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사회적 혐오 표현 및 비하 행위 차단할 확실한 기준 마련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 내놓기 등을 요구했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먼트

‘40억 포상금’에 쏟아진 탈세 제보[횡설수설/장원재]

탈세 제보로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아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은 스위스 은행 UBS의 전직 직원 브래들리 버켄펠드다. 2008년 탈세 방조 혐의로 체포된 그는 내부고발자로 변신해 UBS 비밀계좌에 재산을 숨긴 탈세자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넘겼고, 출소 후 포상금 1억400만 달러(약 1600억 원)를 챙겼다. 미국 정부가 탈세를 도운 UBS로부터 받아낸 과징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IRS가 한도 없이 징수액의 15~30%를 제보 포상금으로 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의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2003년 건당 최고 1억 원에서 점차 늘어 2018년부터 건당 최고 40억 원이 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탈세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국세청 조사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렵게 되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금액을 올린 것이다. 최근에는 100억 원 넘는 서울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부동산 탈세 제보만으로 수억 원대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설해 5개월 동안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장 많은 유형은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모로부터 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자식 간의 은밀한 거래를 누가 알겠나 싶지만, 지인이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물론 다른 가족이 신고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담하거나 방조한 책임은 안 묻고 세금 징수에만 활용한다”는 국세청 방침이 제보를 끌어낸 것이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수한 세금의 5~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고액 탈세 제보에 대한 보상은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은 고액 자산가와 다국적 기업의 탈세가 늘자 지난해 말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했다. 제보를 통해 150만 파운드(약 3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받아낸 경우 15~30%를 포상금으로 준다. 국내에선 지난해 탈세 포상금을 건당 최고 100억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쁜 짓 신고하면 평생 팔자 고칠 만큼 받게 하자”고 말한 바 있다.

▷탈세 포상금은 징수 비용도 덜 든다. IRS는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 1달러를 걷는 데 10센트 이상을 쓰는 데,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징수 비용이 4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경계할 부분도 있다. 국내에선 과거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제도, 이른바 ‘카파라치’를 도입했다가 전문 신고꾼이 활개 쳐 폐지한 전례가 있다. 탈세 포상금이 금액이 훨씬 더 큰 만큼 근거 없는 제보가 난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고액 제보’에 집중해야 허위 제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으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한동훈 복당 의지...“천년만년 무소속이면 이렇게 모이셨겠나”	정치	
2	“오세훈 당선인 확정 못할 판” vs “진영 상관없이 재선거하라”	정치	
3	잠실7동 이틀째 대치...공무원도 “선관위, 이런 모자란 집단”	사회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산 북갑 재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이 4일 “부당하게 제명된 날 반드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다”며 복당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한 당선인은 올해 1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제명을 결정한 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당선인은 이날 부산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당선 이후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보수 재건 계획이 있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선거 승리도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소원했던 많은 의원님들과 덕담을 나누며 통화했는데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보수 재건 방향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시했던 보수 재건의 명분이나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번 선거 민심을 바탕으로 보수 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를 겨냥해 “언행이 보수 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다”며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다”고도 부연했다. 한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가 왜 정치하는지 그 것에 관한 공감대를 통해 보수 재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걸 먼저 생각한다. 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도 공언했다. 한 당선인은 “저의 승리가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 폭주에 대한 명백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해야 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드러난 민의(民義)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 당선인은 “이 대통령이 자기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여러 방식으로 개입했지만, 결국 무소속인 한동훈에게 패배했다”며 “공소취소 같은 험잡(挾雜)을 시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물어보자는 걸 선거 내내 얘기했는데 그 점을 받아들이라고 경고한다”고 했다.

의정 활동에 있어 무소속의 한계를 묻는 말에 “천년만년 무소속이었으면 이렇게 많이 모이셨겠나”라며 “저의 당선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공약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말씀드린 상황이라서 그 이행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어 “(1호 입법안은) 발달장애 지원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회수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재보궐에 당선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유의동 의원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은 정치인이다. 좋은 정치인이 국회로 들어오는 데 대해 (당선 소식에) 박수를 친 것”이라고 했다.

2)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파행을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는 이틀째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역 선거구의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 재선거를 요구했다.

● ‘용지 부족’ 송파 투표함 이틀째 제자리

잠실7동 2투표소가 마련된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경로당 앞에는 3일 밤부터 인근 주민뿐 아니라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300명이 몰려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고, “투표함 이송을 막아야 한다”며 투표소를 겹겹이 에워쌌다. 4일 0시 10분경엔 한 시위 참가자가 투표소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난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70대 여성 주민은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대치가 장기화하자 4일 오전 10시 45분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다. 시위대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대)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거나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투표함 이송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진영과 상관없이 명백한 부실 선거이므로 재선거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급기야 현장을 떠나려면 김 처장을 시위대가 “책임져라, 다시 건물로 들어가라”며 밀치고 가로막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000여 명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투표함이 억류되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송파 지역구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는 5일 예정했던 당선증 교부식이 취소됐다. 송파구청장도 당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 과천시도 밤새 시위, 헌법소원 예고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 앞에서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3일부터 밤새 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4일 오전 일찍부터 집결해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찰 추산으로 새벽 한때 1200여 명까지 늘어난 시위대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등과 합류해 선관위 정문 개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와 펜스 철거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차량 이동을 막겠다고 밝히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위헌인지 따져달라”며 일반인이 낸 헌법소원이 1건 접수됐다. 청구인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게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범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문제가 된 투표소 중 일부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사/뉴스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제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현장에 나타났다. 시위대들은 “부정선거 척결”, “선관위 해체” 등 의 구호를 외쳤다.

4일 이날 오후 7시 기준 잠실 제7동 제2투표소 앞에는 경찰 추산 약 600명 이상이 모여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투표소 주위를 원천 봉쇄했다. 현장에서 구호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내부 선관위 직원들과 투표 참관인들의 식사 문제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순애 송파구의원은 이날 오전 투표소를 찾아 건물 내부 직원 10여명이 어제부터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시위대를 설득했다. 김 구의원을 통해 내부에 식료품이 전달됐다. 아파트 단지 내 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출근시간대 차량 통행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장 지원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파구 공무원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를 공개 비판했다. 전날 송파구 소속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 ‘선거관리 도저히 못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긴말 안 한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현장에 안 올 수가 있느냐”며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과 일 못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는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라”며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고 퇴근시켜 달라. 내일 우리 지자체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투표소를 찾은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선관위는 4일 새벽 긴급회의를 연 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의 혼란은 밤새 이어졌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인파가 수백명이 몰렸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압박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시민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투표소 주변에 모여들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개표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표함 반출 중단을 요구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시위대의 투표함 반출 저지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약 2000명 분량의 투표지가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노태약 선관위장 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으로 파악”	정치	
2	젠스황, 깃잎에 삼겹살 씹...‘막내’ 구광모 회장이 고기 구워	사회	
3	시진핑 8, 9일 평양 간다... “김정은 초청 국민 방문”	국제	

(1)기사/뉴스요약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됐고,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 개표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 미흡은 물론이고 사태 파악 등도 제대로 못 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3일에는 14곳이라고 발표했다가 4일 인천 지역 2곳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체 1만4228곳 중 67곳이었다. 이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를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각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할 때 준비해 놓은 예비용 투표용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지침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다. 윤 실장은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송파구에서는 투표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오후 2시경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공개한 송파구 공무원 단체대화방에는 당일 오후 “(용지가 없어) 곧 투표 중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너무 고충이 심각하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노 위원장은 3월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후임 인선 지연으로 선관위원장직은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 2인자인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18개 기동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함 반출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건물 뒷문에서 스크럼을 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오전 8시 15분경부터 시위대를 한 명씩 분리해 손과 발을 잡고 끌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8시 54분경 경찰은 시위대를 전원 이동 조치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투표함 2개 반출을 완료했다. 3일 오후 10시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지 약 35시간 만이다. 경찰은 곧바로 투표함을 차량에 실어 개표장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했고, 선관위는 이날 비로소 지방선거 개표를 마무리했다.

2)기사/뉴스요약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첫날 일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고깃집에서 '삼소(삼겹살·소주)' 회동을 가졌다. 네 명의 CEO가 이끄는 기업, 그룹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9700조 원 가까이 된다. 거의 '1경 원' 짜리 저녁 테이블이 만들어진 셈이다.

5일 황 CEO는 이날 오후 7시 10분경 홍대입구역 인근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최태원·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과 저녁을 함께 했다. 이날 모인 네 CEO가 이끄는 기업 및 그룹의 시가총액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약 8280조 원이다. SK하이닉스 등 SK그룹은 1139조 원으로 추정된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LG그룹은 약 223조 원, 네이버는 40조~41조 원 정도다. 모두 더하면 약 9684조 원으로 '1경 원(10,000,000,000,000원)' 가까이 된다.

황 CEO가 도착하기 전,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은 먼저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눴다. 격식을 갖춘 공식 회동이라기보다 편안한 저녁 식사 자리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이후 황 CEO가 식당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시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황 CEO는 최 회장과 이 의장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네 사람은 맥주잔을 들어 건배한 뒤 식사를 시작했다.

네 사람은 별도의 통역 없이도 대화를 활발히 이어가며 도중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황 CEO의 장녀이자 엔비디아 로보틱스 마케팅 총괄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했던 흰색 박스를 들고나와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선물을 직접 나눠줬다. 해당 선물은 'HBM 칩스'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11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출시한 '허니바나나맛' 과자다. 반도체 칩을 본뜬 사각형 형태로 제작됐다.

황 CEO는 시민들에게 HBM 칩스를 나눠준 뒤 "More HBM! More HBM! (HBM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이어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 한국에 왔다"며 "한국은 매우 잘하고 있다. 한국의 파트너들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에 감사하고 축하하고 싶다"며 "오늘은 믿을 수 없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한국 AI(인공지능) 기술센터 설립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한국의 AI 연구 엔지니어, 로봇 공학자들을 채용 중이며 이들은 우리의 모든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를 아신다면 이곳에 일하러 오라고 전해 달라"고도 했다. 또 황 CEO는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며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3) 기사/뉴스요약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2019년 6월 방북 이후 약 7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시 주석이 두 번째 방북에 나서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앞서 2008년 국가부주석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주석 취임 후에는 2019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9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한이 4일 김 위원장의 새 핵물질 생산 시설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시 주석의 방문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계기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공식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새 핵시설 공개에도 시 주석이 북한에 가는 것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북한 입장에서 (시 주석 방북을 통해) 핵무력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러 ‘반미 연대’ 공고화를 통해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방북을 통한 경제 협력으로 북-러 밀착으로 약화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에 대응한 북-중-북-중-러 안보 협력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사설]TSMC “삼성의 추격은 꿈”... 1983년 인텔도 “망상”이라 비웃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인 대만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이 4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삼성 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상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앞두고 자사 경쟁력을 강조하고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의 밀착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7.2%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단기간에 선두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 환경 변화는 추격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TSMC도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빅테크 등이 일부 생산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려 ‘공급 병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추격자들에게 기회다. 삼성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높아지고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수주가 이어지는 만큼 여세를 몰아 격차를 좁히고 ‘파운드리 양강 체제’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TSMC는 안정적인 파운드리 매출을 토대로 막대한 설비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 메모리 업황에 실적 영향을 받는 삼성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무게중심을 두는 노사정 3자의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 삼성은 고대역폭메모리(HBM),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기업이다. 믿고 생산을 맡기려는 고객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내부 갈등을 키우는 성과급 파업과 같은 자해 행위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21세기 편자의 못’으로 불리는 반도체 경쟁은 국가 대항전이다. 웨이 회장은 “TSMC의 파운드리에서 시작해 후공정인 패키징 테스트, 시스템 조립 등 수십 년간 대만이 축적한 생태계는 한국이 단기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팀 타이완’에 맞서 ‘팀 코리아’의 반도체 생태계 추격전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 43년 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을 때 미국 인텔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지만, 삼성은 해냈다. K반도체가 더 뛰지 못할 이유가 없다.